

마.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평가회의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평가회의」가 2010년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남북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단 장	김영탁(통일부 상근회담대표)	박철수(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참가자	이강우(통일부 관리총괄과장) 김현철(통일부 과장) 김신철(통일부 관리총괄과 사무관) 권준호(기재부 남북경협팀 팀장) 김진선(지경부 남북경협팀 팀장) 안영욱(한국토지공사 팀장) 이승욱(한국토지공사 차장)	오광옥(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책임부원) 원용희(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책임부원) 만지성(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리영주(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원) 리응식(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원) 김순남(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원) 윤승현(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협력부 부장) 한명철(민족경제협력연합회 처장) 홍시권(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남북은 2009년 12월 12일부터 22일까지 남북 합동으로 실시했던 중국·베트남 해외공단 시찰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개성공단의 발전방향과 공동 해결과제를 도출하는 문제 등에 관해 토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평가 회의인 만큼, 남북은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진행하였다.

평가회의를 통해 개성공단 현안문제에 대해 상호 이견이 적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우리측은 개성공단과 관련된 남북 쌍방의 관심사에 대해 단계적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측은 차기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3통문제와 숙소문제를 의제로 하여 2010년 2월 1일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다음번 실무회담에서 3통문제와 숙소문제 이외에 개성공단 북한측 근로자의 임금인상 문제가 반드시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였다.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평가회의(2010.1.19~21)

남북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차기 개성공단 실무회담 개최문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듯 보였으나, 북한측은 우리 대표단이 서울로 출발하기 직전에 2월 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 개최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 이로써 남북은 차기회담을 2월 1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평가회의를 종료하였다.

바.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제4차 실무회담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제4차 실무회담」이 2010년 2월 1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남북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영택(통일부 상근회담대표)	박철수(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대 표	이강우(통일부 관리총괄과장) 정소운(통일부 회담2과장)	원용희(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책임부원) 오광옥(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책임부원) 리응식(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원) 홍시권(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우리측은 지난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평가회의」에서 합의한 데 따라 3통문제와 근로자 숙소 건설문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3통문제 중 ‘통행’의 경우 전자출입체계(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이후 RFID) 도입을 기반으로 현재의 ‘지정시간대 통행’을 ‘1일 단위 통행’으로 바꾸는 등 남북간 통행을 보다 간소하고 편리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통관’의 경우에는 현재의 ‘전수조사’ 방식을 ‘선별검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통신’의 경우에는 광케이블을 활용하여 우선 인터넷망부터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하자고 제의하였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숙소는 우선 소규모로 건립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와 함께 개성공단 관련 북한측 근로자의 수급실태도 조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우리측의 제의에 대해 북한측도 3통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3통문제는 기본적으로 군부의 소관사항이므로,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3통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개성실무회담에서는 임금, 숙소 등 여타 현안문제를 협의하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한편, 우리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최근 북한측에서 서해 포사격을 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대해 이는 남북관계 발전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우리측이 개성공단과 무관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반발하면서 정당한 군사연습이라고 강변하였다.

쌍방은 향후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3통문제를 협의한 후, 숙소와 임금문제 등은 당국간 실무회담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인 군사실무회담 일자와 장소 등은 추후 우리측에서 통보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제4차 실무회담(2010.2.1)

사. 개성공단 3통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

「개성공단 3통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이 2010년 3월 2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남북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강우(통일부 관리총괄과장)	리선권(조선인민군 대좌)
대 표	김정배(국방부 중령) 김도균(국방부 중령) 김현철(통일부 과장) 마경조(통일부 서기관)	전창제(조선인민군 상좌) 조철호(조선인민군 상좌) 강 일(개성공단 세관장) 리성수(개성공단 통행검사소장)

남북은 제4차 개성공단 실무회담 합의에 따라 3통문제 협의를 위한 군사실무회담의 개최일정과 장소문제에 대해 남북 군사 당국간 채널을 통해 협의하였다. 협의과정에서 우리측은 그간 군사실무회담 관례에 따라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고, 북한측은 군사실무회담을 고집하면서도 회담장소는 토의의제에 맞게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할 것

을 주장하였다.

최종적으로 우리측은 3통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입장에 장소는 북측 주장을 수용하여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하되, 대표단은 3통문제를 실질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해당 관계관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회담에 임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개성공단 담당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여하고 북한측은 군사실무회담 대표단이 참여하는 형태로 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남북은 전체회의와 분야별 실무접촉(통행·통관, 통신·군통신 분야)을 진행하고 3통문제의 구체적인 해결을 위한 기본입장을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3통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방향과 회담의 운영방식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회담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효율적인 회담운영을 위해 3통문제를 ‘통행·통관 분야’ 실무접촉과 ‘통신 분야’ 실무접촉으로 분리하여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다.

통행문제의 경우,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을 통한 ‘상시통행’ 보장을 촉구하면서, 3월에 전자출입체계를 설치, 5월부터 전자출입체계와 ‘1일 단위 통행’의 본격 시행을 제의하였다. 통관문제의 경우 신속한 통관을 위해 ‘선별검사’ 방식을 도입하고, 선별검사 비율은 50% 수준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통신문제의 경우 자유로운 통신보장을 위해 인터넷과 이동전화 서비스가 개성공단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실무접촉을 분야별로 운영하는 방식에는 동의하면서도, 3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측이 먼저 이행해야 할 사안들을 강조하였다. 북한측은 먼저 우리측에서 6.15 및 10.4선언을 이행하고 대북 적대 및 대결조장 행위를 중지할 것과 3통과 관련된 남북간의 기존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개성공단과 함께 동해지구에서의 3통



개성공단 3통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2010.3.2)

문제 해결을 위한 설비 및 자재·장비 명세를 새로 제시하면서, 이를 우선적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남북은 앞으로 분야별 실무접촉을 지속 개최하여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며, 실무접촉 일자는 추후 확정하기로 합의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2.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실무회담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실무회담」이 2009년 10월 14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남북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남식(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리영호(민족경제협력연합회 실장)
대 표	김석현(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장) 김충환(통일부 회담2과장)	김철만(국토환경보호성 과장) 김상호(민족경제협력위원회 과장)

2009년 9월 6일 새벽 북한측이 임진강 북한측 지역 댐에서 사전 통보도 없이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무단 방류하여 우리 국민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즉시 대북 통지문을 보내 유감을 표명하고 사고원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류계획을 사전에 우리측에 통보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9월 7일 통지문을 통해 임진강 상류에 있는 “언제(堰堤)의 수위가 높아져 긴급하게 방류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는 방류시 사전에 통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우리측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해명이 아니었고, 우리측의 심각한 인명피해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9월 8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에게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대한 북한측의 책임있는 당국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하였다. 또한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남북공유하천에 대한 피해예방과 공동이용 제도화 문제를 남북간에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한 북한측의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측은 10월 12일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실무회담」을 10월 14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북한측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임진강 사고」에 대하여 책임있는 당국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임진강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남북공유하천에서의 피해예방과 공동이용 제도화를 위한 3원칙」을 제시하였다.

남북공유하천에서의 피해예방과 공동이용 제도화를 위한 3원칙

1.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의 원칙 : 남북공유하천을 공동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용
2. 상호협력의 원칙 : 공유하천 이용과정에서 남북이 서로 협의하고 협력
3. 신뢰의 원칙 : 공유하천 이용에 있어서 남북간 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

나아가 우리측은 이러한 3대 원칙을 토대로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통보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남북공유하천에서의 방류시 댐 명칭, 방류량, 방류 이유 등을 명시한 통보양식을 전달하고, 사전에 이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북한측은 “향후 방류시 남측에 통보하겠다”고 확인하였다.

북한측은 기본발언에서 “임진강 사고로 남측에서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였고, 유가족에 대해서도 심심한 조의를 표명하였다. 갑작스러운 방류 원인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히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남북은 차기회담을 통해 홍수예보체계와 공유하천 공동이용 등의 제도화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구체적 일정은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3.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2010년 2월 8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남북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남식(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강용철(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대 표	이천세(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	주광일(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책임부원) 리경진(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과장)

우리측은 이번 회담에서 금강산·개성 관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3대 조건 즉,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의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장장치 마련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우리측 대표단은 기조발언에 앞서 금강산에서 피격 사망한 故 박왕자씨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하는 묵념도 실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금강산 관광객이 사망한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한다’고 하면서도,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은 본인의 불찰에 의해 빚어진 불상사라는 등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또한 우리측이 제기한 3대 조건에 대해 사건 발생 직후에 ‘진상’에 대해 해명한 바 있으며,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 문제 역시 확고히 담보된 만큼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강변하였다.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2010.2.8)

또한 ‘실무접촉 합의서(안)’을 우리측에 제시하면서 개성관광은 2010년 3월 1일부터 금강산 관광은 4월 1일부터 재개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3대 조건은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므로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관광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우리측의 입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호응해 오지 않아 남북 양측은 차기 회담을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제3절 인도분야

1. 남북적십자 회담

「남북적십자회담」이 2009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남북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영철(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최성익(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대 표	김의도(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김동식(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박용일(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로학철(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부장)

정부는 그간 이산가족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다. 8월 17일 우리측 현대그룹과 북한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사이에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가 인도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에 적

극 대처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측은 8월 20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의하여 1년 9개월 만에 「남북적십자회담」이 재개되었다.

우리측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3원칙」을 제시하고, 이러한 3원칙 하에 이산가족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의하였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3원칙

1. 인도주의 정신 존중 원칙 : 남북간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조건 없는 이산가족 교류 지속
2. 근본적 문제 해결 원칙 :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 상시 상봉, 고향방문 및 점진적 자유 왕래의 실현
3. 상호 협력의 원칙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상호 협력

아울러 우리측은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규모 및 일정을 제시하고 2009년 내 추가 상봉과 2010년 설을 계기로 한 상봉행사도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다. 한편, 이산가족상봉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자고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



남북적십자회담(2009.8.26~28)